



##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행위 규칙의 재구성 팬데믹 시대의 인간-기술-미디어 연합환경과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고찰

박진우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이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를 둘러싼 인간-기술-미디어 연합환경의 형성 과정을 사회적 권력의 변동, 특히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의 출현과 그것의 작동 방식에 결부시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인간-기술-미디어' 연합환경이 우리의 일상을 규정하는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축으로 재구조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핵심적인 주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인간-기술-미디어가 결합된 새로운 연합환경이란 무엇인지를 개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둘째, 새로운 연합환경의 정치적 층위에서 '테크놀로지를 내장한 사회적 규칙'의 출현이라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등장은 과거의 규율적 주체화의 과정을 테크놀로지 기반의 자동화된 연산 및 가치평가를 통해 주체들의 '자동화된' 사회적 관계성을 핵심적인 구동 메커니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2020년 이후의 팬데믹의 순간에 나타났던 주요한 변화의 양상과 결부시킨다. 그리고 팬데믹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킨 중요한 계기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가 수립한 새로운 생활환경의 특성과 작동 방식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이론의 지평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KEYWORDS** 인간-기술-미디어 연합환경, 팬데믹, 통치성/거버넌스, 자동화된 주체성, 행위 규칙

---

\* jinwoo421@gmail.com

## 1. 문제 제기

오늘날 인류 문명을 디지털이라는 기술적 차원과 분리하여 살펴보는 일은 무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삶과 경험의 양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물론 장기적인 사회 변동의 경로라는 차원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과 결부된 인간-기술-환경 네트워크의 변동을 세심하게 살펴 보아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과 비평의 초점을 미디어와 테크놀로지의 진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행위 규칙의 변동에 대한 학문적 해명으로 맞추어 나가야 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삼은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이 가져온 행위 규칙의 모듈화 과정이 우리의 일상성을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새로운 경험 구조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동시대 연구자들 모두에게 주어진 이슈라 하겠다. 그럼에도 팬데믹의 순간을 지나면서 기술과 인간의 미래에 대한 논의들이 한층 낙관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소위 ‘뉴노멀’로 표현되는 지배적 담론은 대중들의 경험 구조에서 현재의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정치적·기술적 언어이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21세기의 새로운 자본주의와 결합한 결과인 ‘사회적 가속화(social acceleration)’(Rosa, 2013/2020), 이와 결부된 일상과 노동의 변화, 사회혁신,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거버넌스’와 같은 문제들은 손쉽게 논의의 표면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문제를 인간과 기술, 그리고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질문으로 확장해 보고자 한다. 즉 인간과 기술, 그리고 미디어가 융합된 새로운 연합환경의 등장에 따른 보다 확장된 미디어 이론의 형태와 그 전망에 대한 물음으로 전환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혁신과 새로운 인간-기술-미디어 연합 환경의 등장이 제기하는 한국 사

회의 구체적인 정치적·사회적 지형의 변화는 무엇인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기획이 이러한 환경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통치 합리성과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실천의 가능성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여기서 일차적으로 다룰 문제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이 연구는 인간-기술-미디어가 결합된 ‘연합환경(associated milieu)’(Simondon, 1958/2011)에 대한 개념적 검토를 우선 진행해 보고자 한다. 특별히 환경(milieu), 생활환경(Umwelt)이라는 개념들을 통해 생태학적인 관점과 언어로 기술과 미디어 영역이 일상적으로 대중들의 경험 구조의 형성에 개입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던 지적 자원들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둘째, 이 연구는 새로운 인간-기술-미디어 연합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통치 합리성의 변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등장이라는 조금 더 거시적인 맥락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논의가 통치 합리성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은 새로운 일상적 환경이 경험 주체들의 사회적 관계성을 재창출함으로써,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주장처럼 “주체의 실천 방식을 통솔하는 다양한 지식과 실천, 테크닉으로 구성되는 통치 프로그램이자 통치 실천에 관한 사유 방식(Gordon, 1991, pp. 16-17)”에 대한 질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이다. 이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1990년대 이후의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사유와 정책의 수용 과정에서, 그리고 2010년대의 고도지능정보 테크놀로지의 등장과 맞물린 새로운 사회 혁신 프로그램의 등장 과정에서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이승철·조문영, 2018). 2020년 이후의 팬데믹의 순간은 바로 이러한 기획이 한층 고도화된 국면이자, 동시에 더욱 폭발적인 속도와 범위로 대중들의 일상에 침투하게 되었던 국면일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 시대의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인간-기술-환경 네트워크의 문제, 그리고 정치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 팬데믹의 순간에

겪었던 사회 변동의 급속한 진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 새로운 기술적 거버넌스 장치의 도입을 통한 통치 합리성(governmental rationality)의 수립이라는 문제로 요약해 보고자 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기술-미디어’ 연합환경이 우리의 일상을 규정하는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축으로 재구조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핵심적인 주제로 삼는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의 구조는 과연 어떤 지배적인 사회적 상상(social imagination)의 형태로 정치와 민주주의를 대하는 행위 규칙을 일정하게 고착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 걸음 진전된 논의를 펼치기를 희망한다.

## 2. 새로운 연합환경의 쟁점 검토 : 인간-기술-미디어의 상호 연관

### 1) 기술과 생태학의 상호 연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세 명의 저자들

우선 인간-기술-미디어의 연합환경이라는 쟁점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해 보자. 이 문제는 사실 20세기 후반 인문사회과학 영역에 걸쳐 새로운 생태학적 사유가 등장하면서 제기되었던 이론적 의제였다(Latour, 2019. 5. 31). 그것이 철학이든 사회학이든 개별적인 학문 분야 내에서 가시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오랫동안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2020년에 시작된 팬데믹의 순간과 같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생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동안 이론적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생태론적 전환, 혹은 연합환경에 대한 상상은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Latour, 2021). 아래에서는 인간-환경-기술-미디어의 연합에 관한 사유를 제안한 선구적인 세 명의 저자들(가타리, 베르크, 스티글러)에 대한 간략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인간과 기술의 생태학적 융합’이라는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되돌아갈 최초의 텍스트는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펠릭스 가타리(Guattari, 1989)의 <세 가지 생태학(*Les trois écologies*)>이다. 1980년대 유럽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가타리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당대 프랑스의 환경론자(‘자연보호’주의자), 녹색당, 그리고 아나키스트 생태주의가 각기 보유한 정치적 잠재력 문제였다. 그는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이 생태적 불균형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즉자적인 비판에 머무르던 당대의 조류에 반발하면서, 논의 자체를 고도화하기를 원했다. 그 결과 그는 ‘생태학적 불균형’의 의미를 ‘자연(지구, 환경)-인간(개인, 주체성)-사회(공동체, 정치)’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사고하자고 주장하였다(Guattari, 1989/2003, 8쪽). 이러한 발상 전환의 일차적 목표는 당대의 환경보호론, 생태적 근본주의, 그리고 사회 생태주의가 서로 공존하면서 한층 진전된 통합적 정치 프로그램에 합의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그는 통합적 정치 프로그램을 정초할 수 있는 독자적인 미적·윤리적인 범주의 ‘생태철학(écosophie)’를 새롭게 구축한다(Guattari, 2018). 그의 생태철학의 개념은 환경생태학, 정신생태학, 그리고 사회생태학이라는 상호 보완적인 세 가지 영역에 걸쳐 벌어지는 자연의 오염, 인간 주체성의 오염, 그리고 사회관계의 오염을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여기서 미디어는 이러한 오염의 동시성과 융합을 야기하는 중요한 매개자였다. 그에게 미디어란 “돌연변이적이고 파괴한 해초들이 베네치아 해의 간석지를 휩쓸고 가듯이” 세 가지 생태 전환을 ‘퇴폐적인’ 이미지나 언표의 집합으로 물들이는 주체이다(Guattari, 1989/2003, 25쪽)<sup>1)</sup>. 따라서 그는 이러한 오염에서 자연과

---

1) 이 저서에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가타리는 당시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에서 TV 진행자의 삶을 막 시작한 트럼프라는 개인을 환경과 정신, 사회관계 모두에 걸친 총체적인 생태 파괴의 실현 사례로 간주한다. “사회생태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색다른 종류의 해초가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물을 통하여 자유로이 증식하고 있다. 트럼프는 뉴욕, 애틀랜타의 전 구역을 점령하고, 그 구역을 ‘개축한다’는 구실로 집세를 올리고 동시에 수만의 빈곤 가족을 압박하여 그 태반을 ‘집 없는(homeless)’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홀리스는 환경생태학에서 죽은 물고기에 상당하는 것이다. 또한 제3세계가 야만적으로 탈영토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말할 필요가 있다. 이 야만적 탈영토화는 제3세계 주민들의 문화 구조, 거주 양태, 면역 방어시설, 기후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Guattari, 1989/2003, 25-26쪽).”

문화가 구분될 수 없고, 여기서 우리는 ‘생태 체계, 기계권(méchanosphère),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준거 세계’ 간의 상호작용을 ‘횡단적으로’ 사고하도록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가타리의 생태철학은 정치적 관점에서의 각성, 특이성의 개념에 근거를 둔 주체성의 개념을 전면에 내세운다. 환경에 대한 개인의 미학적 각성이 우리에게 특정한 (오염된) 생태 환경을 부과한 사회구조에 대한 정치적 각성에 이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주체성의 출현이 예고될 것이라는 다소 예언적인 속성도 나타난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생태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기술과 미디어라는 새로운 환경 요소(이자 문화 요소)에 대하여 다소 투박하게라도 통합시키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오귀스탱 베르크(Augustin Berque)가 주창한 ‘외쿠메네(Écoumène, 인간적인 거처)’의 이론 역시 논의의 진전에 특별한 도움을 준다. 공간과 지리 연구자이자 일본 연구자인 베르크가 발표한 〈외쿠메네(2000)〉는 ‘지구상의 모든 사물과 인류의 배치에서 생겨나는 관계를 통해 규정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말한다. 그는 인간 존재의 생명 토대, 사회성 및 그 토대인 언어적 상징성, 그리고 기술이 통합된 형태로 출현하는 공간적 단위이자 인간이 거주하고 살아가는 환경적 기반을 ‘에쿠메네’라고 정의한다.

외쿠메네 개념은 원래 지리학에서 ‘인간의 환경’, 그러니까 ‘지구에서 인류가 점유하고 있는 영역’, ‘사람이 사는 땅’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Berque, 2000/2007, 18쪽). 그러니까 이는 인간 환경의 전체로서,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물리적이고 생태적인 것이다. 이 요소들 간의 상호성을 나름의 방식으로 조화시키는 데 성공하였을 경우, 인간은 그곳을 이른바 ‘거처(oikos)’라는 말로 부르게 된다. 기술은 여기서 인간이 자신의 신체성을 우리 환경 내의 사물들 속에 투과(trajection)하는 일련의 체계를 지칭한다. 즉 그가 정의하는 기술이란 환경 속으로 인간을 투사(projection)하고, 상징을 통해 인간 속으로 환경을 내사

(intrajection)시키는 계기이자 수단이다. 베르크는 우리의 ‘사회 제도 (corp social)’를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바라본다(Berque, 2000/2007, 163-164쪽).

베르크의 외쿠메네 개념은 자연과 기술, 그리고 이를 둘러싼 생태 환경의 내적 관계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적 전제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신 이 요소들의 결합에 의한 생성의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기술,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주체화의 과정이 서로에게 달려 있다는 상호성의 원칙을 발견한다. 베르크의 말에 따르면, “환경은 신체를 연장하고 신체는 환경을 연장한다(Berque, 2000/2007, 203쪽).” 더불어 당대의 무수히 많은 인간-기술-생태 융합론과는 달리, 어느 하나의 우월성을 철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여기서 발견되지 않는다.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이는 ‘자연-문화’의 관계에 대해 근대성이 설정한 ‘함정’에서 벗어남으로써, 비로소 인간(정신, 의미, 상징)-기술-환경이라는 3차원을 포괄하는 새로운 사유 방법에 접근하는 길이기도 하다.

철학자 베르나르 스티글러(Bernard Stiegler)는 1994년에 간행된 <기술과 시간(*La technique et le temps*)> 1권을 통해 기술과 문화,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 기술에 내재된 존재론적 충위를 해명하고자 시도한다. 그에게 기술이란 인간 존재 자체가 근원적인 ‘결여(défaul)’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거이다. 그리고 특정한 본질이 결여된 존재인 인간은 따라서 하나의 특정한 방향이 아닌 여러 방향으로 진화해 나갈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렇기에 여기서 사용되는 ‘기술(technique)’이라는 개념은 현대사회의 과학기술(techno-science) 범주를 넘어서, 물질을 유기적으로 조직화시키는 인간 행위의 총체를 포괄하는 것이다(Stiegler, 1994). 여기에는 기술과 미디어, 그리고 이를 둘러싼 환경이 서로를 규정하는 전제이자 전체라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즉 자연은 이미 ‘기술적’이고, 기술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또

재매개하는 수단이자 전제이며, 기술과 문화 역시 원래부터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였다는 의미이다.

알려진 대로 스티글러는 인류학자 질베르 시몽돈(Gilbert Simondon)의 개체화(individuation) 이론을 출발점으로 삼고, '기술적 대상'들을 자신에 대한 인간의 적응 그리고 자신으로의 기능의 수렴을 통해 진화하는 존재로 설정한다. 여기서 기술적 대상들은 인간 그리고 자연적인 대상들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구체화되고, 이들이 서로 결합된 '연합환경(associated milieu)'을 구축한다(Simondon, 1958/2011). 그리고 이는 기술적 대상들이 내재적 원리에 입각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 상호변환적(transductive)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연합환경이란 그것이 작동하는 핵심적인 '거처'(기술-지리적 환경)이다. 여기서 스티글러는 더 나아가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단순히 상호적인 것을 넘어, 인간의 신체를 외재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보철(補綴, prosthesis)' 개념으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술적 대상들이 단순히 인간 신체의 연장(extention)이라는 미디어 생태학의 오랜 전제와는 반대 방향에서, 기술적 대상이 스스로 목적이 되어 신체 그 자체를 구성하는 문제로 관점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Stiegler, 1994, pp. 173-174).

## 2) 새로운 인간-기술-생태 연합환경의 문제 설정 : 미디어 이론의 확장 가능성

지금껏 살펴본 세 저자가 물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기술-미디어 연합환경을 설명하는 이론적 지평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이들 세 명에게 주목한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연합환경에 대한 설명에 필요한 세 가지 축의 융합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과 미디어, 그리고 인간의 새로운 연합환경이라는 문제는 전통적인 미디어 연구, 나아가 미디어 생태학 연구의 범위를 큰 폭으로 확장시킨다. 특히 팬데믹의 순간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의 조건이 근본적인 전환점에 들어섰다고 하면, 이 논의는

기존 사회과학 연구의 인간 중심적 ‘폐쇄성’(김홍중, 2020)을 극복할 수 있는 대단히 의미 있는 문제 설정으로 진화할 수 있다. 이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첫째, 이들은 모두 테크놀로지에 주목하고, 그것에 내포된 정치적인 함의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에서 공통으로 출발한다. 이들에게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술’ 혹은 (더 좁게는) ‘미디어 기술’의 영역이 주도하는 일상의 재구조화된 체계로서의 ‘환경’이 인간 존재를 본질적으로 재규정하는 과정을 나름대로 해명한다. 이 논의들은 따라서 미디어 생태학의 전통과는 다른 맥락에서 ‘기술과 미디어로서의 환경’이라는 관점, 나아가 이러한 ‘연합환경에 대한 더욱 확장된 정치적 분석’(Latour, 2021)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획득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둘째, 여기서 다루는 프랑스어권 저자들은 기존의 미디어 이론,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 생태학 연구의 전통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과소평가되고 있는 저자들이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이들 저자들이 공통으로 현대의 미디어 생태학이 지향하는 기술, 미디어, 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훨씬 일찍 성취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 핵심에는 ‘우리의 환경 자체가 미디어’라는 관점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미디어가 ‘선박이자 환경’이며 “다른 미디어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들에게 서식지 제공을 가능케 하는 환경”(Peters, 2016/2018, 25쪽)이라는 표현의 핵심적인 취지였다. 오늘날의 미디어 생태학은 과거의 미디어 이론의 범위가 콘텐츠/메시지의 의미와 재현 및 효과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을 넘어, 보다 넓은 환경과 인프라의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시도한다(이동후, 2021b). 그런 면에서 보자면 20세기 특유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 이 이론들은 모두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미디어를 매개로 인간과 생명체, 그리고 비인간(inhuman)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연합환경이 구축

되고 작동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문제로 새롭게 자신의 연구 범위를 설정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 이 논의는 우리의 사회적 삶의 경험이 구성되는 방식을 인간-기술-환경이라는 매개적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서, 환경 자체가 거버넌스로서 재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 오늘날 디지털화는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변화한 존재 방식을 직접 설명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상황을 현실적인 것으로 규정하면, 그 상황이 곧 현실성을 갖는 결과를” 낳고 있다(Rechwitz, 2020, p. 6). 그러니까 사회적 세계가 갈수록 디지털과 미디어라는 환경을 지향하게 됨에 따라, 그리고 이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그것이 실질적인 현실성을 획득하게 되고, 그로 인한 중대한 실제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이는 ‘심층 미디어화(deep mediatization)’(Andersen, 2018), 혹은 ‘미디어 통치(mediarchy)’(Citton, 2017, p. 57)라는 규정에서처럼, 우리 시대의 미디어와 기술이 그 자체로 우리 삶의 경험 구조를 결정짓는 환경(milieu)의 핵심을 이룬다는 차원의 문제이다. 미디어가 단순하게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차원을 넘어서, (마치 18세기 서양의 근대적 국민국가와 정치 권력이 수행했던 것처럼),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우리 삶의 경험 구조와 행위 양식의 변화는 물론 사회적 통합과 지배의 기능마저 대체하는 새로운 권력 장치이자 환경으로서 미디어를 인식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그것이 바로 앞서 거론된 저자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은 핵심적인 질문이라 하겠다<sup>2)</sup>.

---

2) ‘포스트휴먼’이라는 이름이 붙는 논의 역시 인간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환경 속에 거주하는 존재이며, 디지털화된 미디어 체계가 이 새로운 환경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지적한다(cf. 박선희, 2021). 하지만 여기서도 미디어가 과거처럼 단순히 현실에 대한 경험과 감정을 매개하고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의미 이상으로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 또한 미디어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일상적 경험을 규정하는 제도적 차원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미디어화(mediatization)’(Couldry, 2020)

따라서 연합환경과 미디어에서 제기되는 정치와 권력의 문제를 지금보다 더욱 정교하게 사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사회적 삶의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날로 커진다는 단순한 진단에서 나아가, 과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치와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를 유발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인간-기술-미디어 연합환경에서 미디어는 모든 데이터와 인프라에 대한 관리 및 제어 센터의 역할을 행한다(Steyerl, 2017/2021). 이미 현실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테크놀로지는 “의미보다는 권력과 조직에 관한 것”(Peters, 2016/2018, 28쪽)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전면적인 부상을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미디어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선택을 내린 것으로 해석하게 만든다. 이는 미디어라는 기술적 대상의 작동 방식에 의해 인간의 경험을 기록하는 방식이 달라짐으로써, 개인의 고유한 역사성과 인격을 형성시키는 경험 구조가 달라지는 과정을 포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새로운 연합 환경의 정치적 층위와 관련, 이는 궁극적으로 ‘테크놀로지를 내장한 사회적 규칙’의 출현에 관한 주제로 수렴될 것이다. 근대 국가의 성립을 시민들의 치안과 안전을 위한 통치의 위임이라고 설명한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의 고전적인 논의를 원용하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한층 고도화된 테크놀로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를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관료주의적 시스템에 자신의 안전과 함께 삶의 안위까지 위탁하는 새로운 양상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평가 히토 슈타이어얼(Steyerl, 2017/2021, 48쪽)은 이를 ‘리바이어던 2.0’이라고 요약한 바 있다. 근대 국가 권력이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던 다양한 통치의 테크닉 속에 테크놀로지와 데이터가 자리 잡게 되면서,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행위 규칙을 창출하는 원천으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이

---

의 명제 역시 이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어지는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2020년 이후의 팬데믹의 순간에 나타났었던 중요한 기술적·정치적 변화의 양상들에 결부시켜 살펴보는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

### **3. 새로운 연합환경의 정치적 층위 : '테크놀로지를 내장한 사회적 규 칙'의 정치적 차원**

#### **1) 정치적 현시(現示)의 방식 : 집회의 소멸과 확장된 감시**

정치적인 변화, 특별히 정치적인 의지의 현시(現示, manifestation) 방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표면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아무래도 팬데믹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집회의 자유에 관한 문제, 즉 '집합'의 소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보다 확장된 감시 시스템의 도입과 맞물려 있다(van Dijck, 2014).

일차적으로 이는 보건 위기 상황이 대중들에게 정치적 활동의 축소와 감시 체계의 강화를 '정상(규범, norm)'으로 강제할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일정 부분 현실화시킨 사안이다(Clover, 2021). 더불어 시민들과 정부 간에 이러한 긴급한 조치의 도입을 시민들이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일종의 합의를 만들어 낸 사안이기도 하다(Nay, 2020). 돌이켜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벌어진 전면적인 봉쇄 조치가 대중들의 기본적인 공적 생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이 오로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치명률을 줄이기 위한 보건 목적에서만 행해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충격적인 일이었다(Fassin, 2021). 따라서 이 사안은 자연스럽게 '평상시'라면 상정하기 어려운 여러 긴급 조치의 법제화가 국가적 위기 국면에 조장된 대중들의 공포감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험, 나아가 시민들이 감시를 오히려 선호하면서 자신들의 자유나 민주적

토론의 권리를 스스로 양보할 수도 있다는 위협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여기서 만약 모든 조치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구, 또 그 과정에서도 차별 행위의 금지나 기본권의 존중 등에 관한 윤리적 성찰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이는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Agamben, 2021)의 주장처럼 재난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된 예외적 조치가 영구화될 수 있다는 우려, 사실상 '서구 사회가 전체주의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서구와 같은 공격적인 폐쇄 조치는 아니었어도, 한국에서도 집회와 같은 정치적 참여의 기제들은 팬데믹 국면에서 가장 먼저 '제거'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미 역사적으로 집회나 사회운동에 대하여 보수적 권력이나 언론이 유달리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있던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공권력 차원에서 시행된 최우선 조치가 바로 집회의 제한 및 금지였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는 한마디로 '모이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여름, 팬데믹의 국면이 일시적으로 진정세에 접어든 이후 이를 정면으로 거슬렀던 몇몇 집회가 다시금 확산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사실도 이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 수준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2021년 10월 <경향신문>의 연속 기획특집 <감염병 시대, 집회의 미래> 기사에 실린 '서울시 집회 금지 통고 현황'에 따르면, 2018~19년 평균 0.002~0.003%의 집회가 경찰에 의해 금지된 반면, 2020년에는 그 수치가 11.1% 그리고 2021년(1~8월)에는 13.7%로 치솟았다.<sup>3)</sup> 2020

3) 오경민·민서영·이홍근·조문희 (2021. 10. 13). "[감염병 시대, 집회의 미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거리로 나왔는데...서울서만 7,071건 막혔다". <경향신문>. URL: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130600035>

년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500인 이상,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4단계에서는 모든 집회 및 행사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각 지자체에서 적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서울역, 광화문, 종로 등의 도심지역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한층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이 조치는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거나 확진자가 줄었다고 해서 해제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이것이 결국 집회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이미지와 인식이 정부와 언론 등을 통해 유포됐기 때문”에 “과도가 해변의 연약한 부위를 먼저 침식하듯 코로나19는 집회의 자유부터 침식했다”고 보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단언한다<sup>4)</sup>.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회의 자유 축소는 단순히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직접적인 기회 제거라는 측면에서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었다. 서유럽 주요 국가들이 팬데믹 초기에 전면적인 섣다운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 제기된 무수한 사회적 비판은, 역설적이지만 이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없었던 나라들 - 한국, 싱가포르, 이스라엘이 대표적이다 - 이 선구적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공공 활동을 통제하도록 만들었다. 여기에는 휴대폰 위치추적 정보,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공공 지역에 설치된 각종 CCTV 정보 등이 방역(확진자 동선 추적)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이 포함된다. 그와 더불어 안전인식 카메라가 장착된 열화상 측정기나 QR코드를 통해 광범위한 범위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이하늬, 2020. 5. 9). 국내에서는 2020년 4월 질병관리본부와 국토교통부 등의 주도로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핵심으로 하는 빅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하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의 동선을 10분 내로 추적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4) 오경민·민서영·이흥근·조문희 (2021. 10. 13). “[감염병 시대, 집회의 미래] 돈도 없고 뺨도 없고…할 수 있는 건 ‘모여서 외치는 것’뿐이었다”. <경향신문>. URL: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130600025>

바 있다. 그리고 4월 11일에는 ‘안심 밴드’라는 이름으로 자가 격리자의 위치와 건강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앱의 도입이 이루어졌고, 또 5월부터는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근거로 경찰, 지자체, 보건 당국이 수집된 디지털 데이터를 한층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된 바 있다(박진우, 2021, 29-30쪽). 사실 이러한 조치들은 ‘온라인 환자 추적(online disease tracking)’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2010년대 이후 의료산업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법적 문제로 막혀 있던 것이었다(Mitchell, 2019)<sup>5)</sup>. 디지털 감시 사회에 대한 무수한 우려들이 제기해 왔던 모든 한층 장치들이 보건 위기를 이유로 일거에 제거될 수도 있는 위험한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감시 사회의 무수한 쟁점들, 예컨대 광범위하게 수집된 정보를 어떤 형태로 이용하고 또 향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거나 폐기하는 방안에 대해 공적으로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일체의 숙의 과정은 아예 생략되거나 대단히 부족했다(cf. van Dijck, 2014). 사회학자 디디에 파생(Fassin, 2020, 2021)의 지적처럼, 우리는 이를 ‘합법적으로’ 또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그저 신뢰하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었다. 그렇지만 시민의 정치적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설사 팬데믹의 상황이 그만큼 돌발적이고 심각한 국면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면 어떤 공적 논의의 절차를 어떻게 거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은 추후 언제라도 진행되었어야만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사실상 폐기되기 시작한

---

5) 이 연구는 특히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을 권장한 ‘헬스맵(HealthMap)’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이 이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어떻게 ‘시크웨더(Sickweather)’ 등의 유료 어플리케이션 가입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는지를 설명한다.

2022년 4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인간-기술 연합환경은 이처럼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정치적 삶의 중요한 규칙을 어느새 바꾸기 시작했다.

## 2) '권력의 도구들'과 '도구들의 권력': 테크놀로지에 대한 낙관적 기대

인류의 문명 단계가 향후 디지털 테크놀로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토대로 삼은 초고도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관측은 사실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cf. Chace, 2016/2017). 하지만 이를 더욱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데 2020년 이후의 팬데믹의 순간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할 대목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우리 일상에 침투하면서 우리의 삶의 규칙 자체를 급변시키는 것에 대한 대중들의 경계심 혹은 비판적 성찰 태도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렸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신들이 가진 자유와 권리의 상당 부분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전제한 '리바이어던 2.0'에 상당히 근접한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국내의 경우 소위 'K-방역'을 통해 전 세계에서조차 '모범적'인 방역 정책이 시행되고 이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한 경험이 있기에, 이 주제 자체는 여전히 다소 낮은 문제 설정에 가까운 것으로 다가온다(황정아, 2020). 하지만 그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 개입이 있었던 서유럽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토록 강렬하기에 우리는 아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걸로 상정된 국가 권력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국가가 그 과정에서 우리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각종 감시 조치들을 도입하고 거주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도시를 봉쇄해 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게 만드는”(Illouz, 2020, p. 12) 경험이 일반화되는 문제였다. 그 과정에서 “어떤 정부도 이 같은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과연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 바 없다”(Fassin, 2020, p. 4). 다시 한국의 사례로 돌아오자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였던 ‘소상공인 피해 구제’와 같은 문제 역시 국가가 방역의 이유로 시민들의 경제적 삶의 권리를 통제하는 것이 어디까지 정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숙의 과제로 제기되었어야 마땅한 것이었다(물론 그런 토론은 전혀 제기된 바 없다).

이처럼 비판적 경계심이 사실상 사라져 버린 상황에서는 그것이 대중들의 경험 구조 속에서 마치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그리고 이것이 소위 ‘빅테크(BigTech)’ 사업자들이 팬데믹 국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구글의 전 CEO였던 에릭 슈미트(Eric Schmidt)가 당시 뉴욕 주지사인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와 함께 2020년 5월 6일에 열린 화상 컨퍼런스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시대를 논의하면서 이들 빅테크 기업들의 테크놀로지가 시민들의 모든 일상적 삶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던 사례가 아마도 가장 의미심장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슈미트 회장이 언급한 ‘원격의료(telehealth), 원격 교육(remote learning), 브로드밴드’로 구성되는 소위 ‘스크린 뉴딜(Screen New Deal)’이란 팬데믹 국면에서의 물리적인 격리를 단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비접촉(no-touch)’의 항구적이고 수익성 높은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생생한 실험실로 만들자는 의미였다. 평론가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은 이러한 시도를 ‘팬데믹 쇼크 독트린(pandemic shock doctrine)’,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 나가는 국면에, 빅테크 기업들은 이를 자신들의 힘을 더욱 키울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Klein, 2020. 5. 13) 하는 것으로 요약한다.

클라인의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미국이건 한국이건 상당수의 공공 서비스 영역의 핵심 기능이 이들 빅테크 기업으로 넘어갔거나 넘어가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지 오래되었다. 팬데믹의 시기에 순식간에 이루

어진 공공 서비스의 사유화(privatization), 즉 공립학교나 병원, 경찰이나 군의 민간 아웃소싱 사례는 적지 않다. 여기에 2030년을 목표로 AI나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같은 새로운 영역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도 이미 본격화되었다(Fassin, 2021).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 변화의 비전은 ‘뉴노멀’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도 언론이나 학술 담론의 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포되었다(박진우, 2021)6).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뉴노멀이라는 담론의 구성요소로 팬데믹이라는 현실적인 위기가 “단지 새로운 기술적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전형적인 기술적 해결책(technological solutionism)”(박진우, 2021, 27쪽)의 필연성을 예고하는 자연적인 전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팬데믹의 국면에서 만약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회 자체의 유지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바로 그 때문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축으로 삼는 사회 전반의 혁신의 정당성은 이미 합의된 것과 마찬가지로 태도이다. 그 과정은 빅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및 프로토콜화된 기계의 존재가 연쇄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실현될 것이라는 논리, 바로 그것이 인간-기술-미디어의 생태 연합 환경에서 기술의 사회적 적용 및 정치적 작용에 관한 뚜렷한 미래의 지배적 담론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의 인간-기술-미디어 연합 환경이 전제하는 정치의 비전 속에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쟁점을 제기할 수 있다.

---

6) 팬데믹의 초기 국면에 게재된 어느 칼럼이 이러한 비전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에서 가장 유용한 도구가 바로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과학을 비롯한 컴퓨팅 사교력이다. (...) 인공지능에는 인간의 심리적 오류가 파고들 틈이 없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정확하게 바이러스의 발생, 변이, 전파, 숙주세포 침투, 복제, 그리고 방출 과정을 설명하고 예측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위치 정보, 통화 정보, SNS 정보, 교통 정보, 의료 정보, 신용카드 정보, 온라인 구매 정보 등을 종합하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러면 실시간 방역 대책도 가능하다. (...) 여기에 더해 축적된 유전자 정보와 면역 데이터를 이용하면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통계학,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 기술, 기계역학, 미생물학, 세포학, 면역학 등이 서로 융합된다(김정호, 2020. 3. 18).”

첫째, 이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의 전면화가 향후 제도적·절차적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이는 에릭 슈미트의 표현처럼 민주주의, 즉 “[자신들에게 비우호적인] 특정 기관이나 공공 공간을 계획하는 데 불만스러운 대중들이 그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일”(Klein, 2020. 5. 13 재인용)과 같은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가능한 일이다<sup>7)</sup>. 이는 단순히 정치적 집회나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테크놀로지가 예고하는 낙관적 전망 속에는 디지털 기술이 가지는 ‘불멸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훨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예상 가능한 혁신적인 사회 시스템을 생성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 스스로 예측되는 주체들의 등장이 전제되어 있다. 안드레예비치 (Andrejevic, 2019/2021, 23쪽)가 “자동화된 미디어는 주체의 자동화를 예견한다”고 표현한 대목의 핵심적인 가정이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보다 강력한 관료적 시스템 - 혹은 ‘테크노크라시’ - 을 통해 우리의 정치적 삶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든 새롭게 구획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 속에서 제시되고 있다.

둘째, 여기서 우리가 흔히 전제하는 사고방식의 전도가 나타난다. 정치학자 미첼 딘(Mitchell Dean)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특정 이슈(예컨대 기후 위기, 환경변화, 인구문제, 나아가 4차 산업혁명 등)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는 소위 ‘문제 설정(problematization)’의 과정이 전도되어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이 이슈들은 보통 어떤 이슈의 결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통치성의 담론 속에서는 그것이 보통 ‘자연적인 인류사적 전환의 결과’로 전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

7) 팬데믹의 국면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생명의 가치를 그다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가시적인 영역에서 제거된다는 점은 꾸준히 언급되었던 중요한 주제이다(김창엽, 2020). 팬데믹에 초래한 비대면 사회의 ‘뉴노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노동력 - 배달 노동자, 돌봄 노동자, 혹은 공공 서비스(대중교통, 우편 등) 노동자 등 - 은 여전히 낮은 수입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건강을 돌보아야 하는 사회적 정당성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오하나, 2020).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자유주의적 혁신의 가치가 동원되고 전파된다는 것이다(Dean, 2010, p. 218). 이는 이슈들이 가지는 정치적·역사적 경로에 대한 인식 자체를 탈각시키면서, 그것의 해결을 위한 통치의 새로운 테크닉과 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핑계거리로 만드는 일이다. 이는 디지털 혁신이나 사회적 혁신 등의 주제를 다루는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공통으로 관찰된다. 팬데믹의 순간을 경유하면서, 이것 역시 “과거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출몰한” 것으로 파악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구획을 넘어 협력에 기반한”(이승철·조문영, 2018, 272쪽). 새로운 정치 제도의 도입, 특히 디지털 기술의 전면적인 도입에 의한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결론으로 손쉽게 귀결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제도적·절차적 민주주의 개념의 후퇴에 대응하는, 기술적 낙관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형태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곧 ‘권력의 도구들이 ‘도구들의 권력’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4. 새로운 연합 환경의 거버넌스 시스템과 ‘행위 규칙’의 문제

이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새로운 연합 환경이 초래할 정치적 경험의 변화를 그것이 야기한 거버넌스 시스템 자체의 변화와 결부시켜 살펴보겠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미디어 플랫폼은 무엇보다 자신의 기술적 특성에 부합하는 특정한 방식의 이용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방식, 간단히 말해 ‘자동화된 사회성’을 형성시킨다(Andrejevic, 2019/2021). 그것은 문화적 삶의 경험의 상당 부분이 오늘날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표현되고, 또 그것들이 대체로 상업적 이해에 따라 제어되는 양상을 보여준다(Bucher, 2018). 이 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정치적 질서는 상당 부분 테크놀로지와 데이터를 관리하는 관료적 시스템에 의존하는 질서의 등장

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는 다시 디지털이 야기한 사회적인 파편화 과정, 그리고 정치적 파편화 과정을 더욱 심화시킨다 (Rechwitz, 2020). 안드레예비치(Andrejevic, 2019/2021, 37쪽)의 표현을 따른다면 일종의 ‘외해적 혁신’, 그러니까 “사회성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분산시키는” 과정이자 “사회적 탈속련화”의 과정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른바 ‘프로그램된 사회성(programmed sociality)’ (Bucher, 2018), 즉 테크놀로지에 의한 사회적 규칙이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인간-기술-미디어 연합환경을 ‘신자유주의’라는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담론이자 행위 규칙의 구체적인 테크닉과 장치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혼한 인식과는 달리 신자유주의라는 담론 혹은 행위 규칙은 대단히 모순적이고 서로 충돌하는 여러 담론과 장치들이 뒤섞여 있는 복합체에 가깝다. 즉 그것은 “다양한 지역적 맥락과 이질적 요소들 사이에서 작동하면서 내외부의 모순과 돌출점들을 접합시키고 조직해 내는 통치 프로그램의 일종이자, 그 결과 탄생한 혼종적 배치(asmsemblage)의 형태”(Ong & Collier, 2005, p. 6)에 가깝다. 그런 면에서 신자유주의의 그 자체는 어쩌면 하나의 통치 합리성,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살펴보아야 하는 대상에 가깝다. 그리고 이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적·담론적 구성체에 대한 질문을 보다 구체적인 ‘통치/거버넌스’의 역사적 구성 및 이러한 행위 규칙의 확산에 따른 대중들의 경험적 양상들에 관한 것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새로운 연합환경과의 관련성이라는 차원에서 주목할 대목은 바로 대중들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행위 규칙’의 변동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통치(성)(governmentality)와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분을 점차 흐리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는 고도의 디지털화, 데이터 사회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기술적

해결책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국가 권력이나 시장에 대해 보다 협력적인 태도를 갖춘 주체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van Dijk, 2014). 그것은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통치성의 영역을 점차 새로운 거버넌스의 공간으로 확장시키면서 ‘숙의와 참여’라는 오랜 민주주의적 가치들이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구조적인 위협에 우리가 직면하도록 만든다.

### 1) 인간-기술-미디어 연합환경이 재구축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의 등장과 진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신공공관리(New public government) 이론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시기에 접어들어 위기에 직면한 서구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모델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기업 경영 및 조직의 이론적 모델을 적극 채택하는 학문적·담론적 경향이 등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장 부각된 용어가 바로 ‘거버넌스’이다(Boltanski & Chiapello, 1999)<sup>8)</sup>. 그렇기에 이 용어는 그 자체로 당대에 확산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조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불어 이 용어는 17세기 이후 서구의 전통적인 정치철학에서 설정하였던 국가, 주권/신민의 모델을 20세기 후반의 새로운 자본주의적 생산에 부합하는 형태로 리모델링하는 차원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Dean, 2010). 이 내용이 바로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통치성(governmentality)이라고 불렀던 개념의 핵심적인 문제 설정이다. 즉 19세기 이후 생명정치(biopolitics) 패러다임이 탄생하고, 규율적 주체성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의 조류들이 점차 “국가의

---

8) 통치와 거버넌스라는 용어 모두의 출발점은 바로 ‘통치하다(gouverner)’라는 프랑스어 동사일 것이다. 이 말은 그 자체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특정한 사태 - 주로 공적인 사태(affairs) - 의 처리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라는 정치적 의미로 흔히 사용되지만, 어원적으로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여타의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특정한 방향의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비대칭적) 관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Monod, 2019, p. 8).

감시 하의 시장에서 시장의 감시 하의 국가”(Foucault, 2004/2012, 120쪽)라는 패러다임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다.

푸코의 강의나 저술에서 이 문제는 1979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1979년 1월 24일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에서의 〈생명정치의 탄생〉 강의를 꼽을 수 있다(Foucault, 2004/2012). 여기서 그는 18세기 시장과 규율 권력의 결합이 만들어 낸 ‘보편적인 통치 장치들의 위기’가 20세기에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었다고 말한다. 즉 18세기 이전의 전제적 규율 권력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을 통해 형성되었던 서구식 자유주의가 점차 내적인 “자기 규율(autogestion)의 ‘자연적’ 메커니즘보다는 일정한 자유를 보장하거나 혹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Foucault, 1994, p. 125)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고전적 시장자유주의가 내세운 합리성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로운 통치 합리성’으로 재규정함으로써, 개인들이 넓은 의미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닥친 통치성의 위기에 대처하는 새로운 조류였다.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단계는 그런 면에서 이처럼 개인들에게 보다 정교한 ‘행위(를 이끄는) 규칙(conduite des conduites)’, ‘인간의 행위를 이끌기 위한 목적의 여러 테크닉과 절차’의 문제를 중요하게 부각시켰던 시기이다(Foucault, 2004/2012, 71쪽). 이는 “새로운 국가이성으로서 ‘최소한의 국가이성’(une nouvelle raison d’État qui est ‘une raison du moindre État’)”(Monod, 2019, p. 43)의 단계를 지칭한다.

여기서 푸코가 언급한 통치성과 거버넌스의 개념적 이행 측면을 지나치게 상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단계가 과거 규율 권력의 주체화 과정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통치성의 단계라고 한다면, 그것은 통치 혹은

관리(거버넌스)의 매개로서 이에 적합한 ‘환경(milieu)’의 출현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통찰일 것이다. 그 환경은 곧 “인종 또는 하나의 종이자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인류와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의 관계를 제어하는”(Foucault, 2004/2012, 245쪽) 장치와 테크닉의 총체이다. 그리고 이는 권력이 더 이상 규율하거나 통제하는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이, 주체들이 스스로를 지식과 계산의 대상으로 최적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주변 환경(밀리유)’의 형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새로운 거버넌스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생활환경을 인간의 삶에 부여해야 한다. 환경(밀리유)은 여기서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어 가능하고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 시스템에 의해 조성되고 조직화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거버넌스는 “맥락과 환경을 조절하여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Andrejevic, 2019/2021, 101쪽)을 직접 지칭하는 용어로 변모한다. 오늘날과 같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이에 기반을 둔 미디어가 환경의 핵심을 이루는 시대에는 데이터를 통해 축적된 행위자의 패턴을 명확하게 추출하고 그 속에 내재된 여러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바로 거버넌스의 역량을 지칭하는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와 같은 거버넌스의 인식과 패러다임이 언제 어떻게 등장하였는지를 명확히 추적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이행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관찰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1990년대 한국의 기업과 시장의 영역에서 처음 제기되었던 혁신적인 ‘경영관리’의 문제가 범주적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은 그것이 정부와 국가 영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일 것이다. 이 시기를 즈음하여 미디어 분야에서도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국가, 조직, 기업 등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치 시스템, 권력행사 구조 내지 의사결정 구조”(윤석민, 2020, 22쪽)를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확산된 바 있다. 그리고 이는 2000년대 노무현 정부가 주도하였던 ‘선진 혁신국가 건설’의 슬로건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이승철·조

문영, 2018). 예컨대 2008년 2월에 간행된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7 권: 정부혁신>(국정홍보처 발행, 56-57쪽)에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공간 창출’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정의된 바 있다.

“거버넌스 패러다임 아래에서는 시민사회와 기업 등 전통적으로 정부 통치의 대상들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대두되고 이들 간의 협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국정운영, 좁게는 행정에 시민이나 기업 등 공공부문 종사자 이외의 개인이나 집단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 조류로서의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근본적 의미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국정홍보처, 2008: 이승철·조문영, 2018, 280쪽 재인용).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 이는 기업과 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차원에서, 점차 국가가 ‘행정서비스의 공급자’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시민사회와 기업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만들어내는 ‘협치’의 구조를 세워나가는 문제였다(Supiot, 2015). 2010년대가 되면 이는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의 중요한 교류 의제였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나 ‘공유 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소셜 벤처 등의 형태로 한층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박원순 시장 재임기(2011~2020) 서울시의 시정(市政)<sup>9)</sup>은 이에 지방정부가 자신을 “기업

---

9) 서울시의 협치(거버넌스) 구조는 시민과 기업, 전문가, NGO/NPO의 참여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이들의 참여를 전제로 다양한 현안 중심의 정책 워크숍을 추진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다. 그 과정에서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 경제 생태계조성,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허브, 서울 혁신파크 조성, 주민참여예산제, 마을총회 개최 및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이 추진된 바 있다(송석휘, 2015). 이 연구는 여기에서 이러한 실험 자체의 의의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거버넌스라는 용어와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었는지를 되짚어 보는 것이 목적이다.

과 시민사회들이 사회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재구성한다는 전제를 표방하였다(장훈교, 2016, 16쪽). 이는 사실상 거버넌스의 문제를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 일치 단결하는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다. 만약 거버넌스를 ‘협치’라고 여전히 번역한다면, 여기에 부합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 권력과 시민사회의 상호 접근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앞서 언급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출현, 그리고 그러한 통치성의 새로운 형태가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던 서구의 경험과 대단히 유사한 역사적·정치적 경험의 층위들을 담고 있다. 한편으로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역량이 꾸준히 성장한 결과물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는 동시에 과거의 권위주의적 통치의 유산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과거에 머무른 운동 방식에서도 탈피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실험된 것이었다(류연미, 2014). 그렇지만 이 과정은 또한 국가가 더 이상 개별적인 사회적 문제에 직접 개입하거나 해결책을 찾기 불가능한 국면에서, 관료제 주도의 전문가 체제가 시민들의 삶을 대상화시켜 나가는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진 어떤 근본적인 변화의 국면을 상징한다. 따라서 김은지(2018)의 지적처럼, 정치 권력이 주도하는 과거의 통치성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시민 주도의 문제해결형 사회운동’을 도입함으로써, 훨씬 효율적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발적인 시민 동원이 가능한 새로운 통치 프로그램이 한층 구체화될 수 있었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당사자의 삶 속에 한층 깊게 침투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층적인 시민 결사를 통한 시민 참여가 자신의 문제를 직접 풀어나갈 수 있는 민주주의의 확장된 경험으로 재조합된다(Boltanski & Chiapello, 1999). 그리고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는 이러한 ‘문제-해결 사이클(problem-solving cycle)’ 속에서 어떤 문제라도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일정 기간 측정 가능한 효과

를 산출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로 설정해 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삼는다(이승철·조문영, 2018). 그런 면에서 거버넌스라는 용어의 의미론과 그것의 실제 작동의 방식은 보기보다 훨씬 세심한 고찰이 필요한 대상이다.

## 2) 행위 규칙 : ‘수치(數治)’ 혹은 ‘비인격적 통치’의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상

2020년에 시작된 팬데믹의 상황은 정치적 삶의 경험 못지않게 일상적 삶의 경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다(비록 양자가 그리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말이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의 순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체하는 일체의 기술 의존적 행위 규칙들이 사회적 경험을 재구성하는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출발점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통치(관리,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의 순간이다. 미시적으로 보아 이는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재편, 그리고 이에 따른 ‘공간과 시간’에 대한 기존 감각들의 변형이 야기되었던 것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박선희, 2021, 12쪽).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 교육 현장은 물론 일상적인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줌(Zoom)과 같은 화상회의 테크놀로지가 폭발적으로 확산된 사례가 이를 대표하고 있다(이동후, 2021a, 106쪽)<sup>10)</sup>.

---

10) 여기에는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던 중요한 규칙이었다는 오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드러냄’은 사회적 삶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였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드러냄의 상호작용’은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차츰 타자의 ‘내면의 심원한’ 속성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고 오로지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외적인 속성에만 주목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고 평가받아 왔다(Carnevali, 2020). 그런데 팬데믹의 순간을 지나면서 ‘비대면의 뉴노멀’이 일상화되는 경험은 우리에게 ‘나타남’이 가져올 수 있는 보다 중요한 차원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게 만든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여러 부정적인 변화의 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리적인 드러냄이 사회적인 상징적 가치들을 생산해 내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이었다(ibid., p. 16).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 환경이 한층 우리의 일상적 삶의 경험에 침투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환경이 삶의 경험의 영역을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는 상황에서 한층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과 그것의 작동 원리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면, 한층 복잡한 논의의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이른바 “비인격적 통치의 모델의 전환”, 그러니까 ‘법의 지배(法治)’에서 ‘수(數)의 지배(數治)’로의 전환이라는 알랭 쉬피오(Supiot, 2015/2019, 6쪽)의 주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장은 한마디로 주권 모델과 민주주의적 심의에 근거한 통치 모델에서 숫자를 기반으로 계산된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기계적 자율 조정 장치에 의한 통치 모델로 이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숫자는 인간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한 가장 순수한 추상이라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 비인격적 통치의 가장 이상적이자 완성된 형태로 흔히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이 새롭게 등장한 거버넌스 시스템이 디지털 시대의 인간-기술-미디어 연합환경에서 구현된 기술적 패러다임을 자신의 고유한 운영 원리로 통합시킨 가장 중요한 결과물에 해당한다. 데이터 사회, 자동화 사회에 대한 오늘날의 많은 분석적 논의들 역시 큰 틀에서 보자면 이 주제로 통합될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서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이처럼 ‘통치를 대체하는 수치(數治)’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용어이다. 고전적인 주권 모델, 법률에 의한 통치 모델이 인간의 정체성과 자유와 의무를 보증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칙들의 지배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숫자에 의한 통치(거버넌스)는 인간 사회의 자기 규율화를 목표로 삼는 것이다(Supiot, 2015/2019, 88쪽). 이는 계산 능력(계량화 작용, 다양한 존재와 서로 다른 상황을 하나의 계산 단위로 치환하기) 및 행동의 프로그래밍(벤치마킹, 랭킹 등)을 통해 도출된 측정치로부터 규범을 추론하는 방식이라고 요약된다(ibid., 89쪽).

“숫자에 의한 거버넌스 또는 수치(數治)가 법의 지배를 전복시키는 현상은 계산을 통해서 조화를 꿈꾸는 오랜 역사의 일부로서, 그 가장 최근의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혁명은 현대의 상상을 지배한다. 이

사이버네틱스의 상상력은 입법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로 규범성을 사고한다. 사이버네틱스 세계의 인간은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행위하는 인간이 아니라,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신호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인간이다” ... “국가의 쇠퇴 및 그것이 초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외에 대응해 하나의 법적 구조가 재등장하고 있다. 이 법적 구조는 전형적으로 봉건적이다. 즉 주종관계의 망으로 짜인 법적 구조가 그것이다. 이 주종관계의 네트워크에서는 각자는 자기보다 더 강한 자의 보호를 구하거나 자기보다 더 약한 자의 충성을 구한다”(Supiot, 2015/2019, 23-24쪽).

이 문제를 팬데믹 시기의 경험에 결부시켜 보면,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아무래도 19세기 천연두 예방접종을 둘러싼 논쟁일 것이다. 이는 환자 개인의 질병의 특성이 아니라 '평균적인' 치료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통계가 정당화해 주었던 상황에서 유래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평균치를 기준으로 규칙성의 척도를 통해 보건 활동을 펼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것이다(Desrosières, p. 104). 그런 면에서 공중보건의 영역이 앞서 언급한 '평균(정상, 규범, norm)과 확률'<sup>11)</sup>에 기초한 생명에 대한 통치, 합법성보다는 규범성(확률적 정상성)에 기초한 통치라는 국가 권력의 작동 방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라 하겠다(Le Bras, 2000). 팬데믹의 국면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었던 공중보건의 의사결정 방식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것은 보통 “극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우선순위에 두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제시하는 가상 시나리오의 위험 가능성을 상정하고, 최악의 상태에 대한 대응을 정치적 합리성의 체제로 채택하는”(Zylberman,

11) 예컨대 통계적으로 예방 접종시와 그렇지 않을 시의 사망 확률 계산의 차이, 그리고 예방 접종자의 기대 수명의 증가와 같은 통계적인 계산 결과가 이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었다(Le Bras, 2000).

2014, p. 14) 수순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여기서 안전(safety)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사회적 안전(security)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는 관계에 심각한 불균형이 야기된다. 즉 정치가 더 이상 대중들의 권리에 대한 집합적 요구의 분출이라는 의미보다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시민들의 '민원(民願)의 해결'에 가까운 과정으로 의미가 전이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박진우, 2021).

바로 이러한 새로운 행위 규칙이 현재 고도화된 지능형 테크놀로지,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을 통한 사회적·문화적 관행의 변화, 커뮤니케이션과 행위 양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Andrejevic, 2019/2021). 그러한 행위 규칙은 흡사 비인격적 통치, 혹은 '수치(數治)' 기계를 구동시키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테크놀로지는 이처럼 자신이 수행하는 복잡한 가치평가(valorization)의 과정을 지속 가능한 새로운 사회적 질서의 표준화 원리로 삼게 만드는 다양한 장치들을 구축해 나간다. 즉 디지털 경제를 통해 행동의 개별화(personalization), 데이터 트래킹에 의한 개인화와 표준화, 이를 통한 가치평가(순위, 등급 등에 대한 평가)의 과정이 진행되며, 그 결과 누구에게나 가치평가(evaluation)가 이루어지는 고유한 일반화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Lamont, 2012). 이는 서양의 근대 사회를 성립시켰던 합리화 과정의 기반으로 작동한 '계산 가능한 규칙의 복합체'를 통해, '최적화(optimization)'라는 목적을 위해 수치화된 규칙이 만들어 낸 기술적, 규범적 규율의 합리성에 인간의 행위를 종속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한 거버넌스 시스템은 최적화의 과정,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더욱 투명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립되는 질서 개념을 상징한다. 이같은 거버넌스에 순응하는 것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형성된 보편적 합리성'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습득(appropriation)'하는 것이다(Rechwitz, 2020, p. 50).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 모든 개별적 주체들은 자신의

행위와 실천이 누적되고 기록되어 만들어진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 - 혹은 ‘개인별 프로필(profile)’ - 을 축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연합환경에서 주체에게 자동화된 해결책을 제공하는 형태로 일상적 삶의 경험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쉬(Lash, 2018)가 말한 ‘정보적 경험(informational experience)’에 해당하는 주체의 경험 구조가 이 과정에서 도출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역설이 내재되어 있다. 숫자라는 가장 순수한 추상에 의한 비인격적 통치는 - 유럽의 경우 11~12세기의 지적 담론에서 처음 출현한 - 근대 국가의 ‘초월적 질서’의 형상(정치와 법률)보다는 오히려 이해 당사자들(예컨대 정부와 시민, 기업과 노동자/소비자 등) 간의 개별적인 계산과 협상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2015/2019).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를 축으로 작동하는 연합환경은 이러한 개별적인 주체들 간의 계산과 협상의 과정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수치(데이터)를 생산하고 또 제공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 과정은 과거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예속된 관계, 소위 ‘계약적 신분 관계’에 가까운 형태를 훨씬 더 많이 창출하고 있다(ibid., 369쪽).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미디어를 토대로 창출된 수치(데이터)가 상정한 비인격적인 통치의 관계에서는 그보다는 훨씬 인격적인 주종관계인 경우가 많다. 그것이 바로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과 일상의 영역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관찰되는 현상에 해당한다.

## 5. 결론 및 함의

“인간의 생존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장소(생명환경, milieu vital)’인 외쿠메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능력에 달려 있다”(Supiot, 2015/2019, 11쪽).

이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인간-기술-미디어 연합환경을 둘러싼 이슈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논의의 초점을 이러한 연합환경과 결부된 사회적 권력의 변동, 특히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의 출현과 그것의 작동 방식에 관한 것에 맞추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삼은 새로운 '기술적 환경'이 야기한 행위 규칙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우리의 일상성이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새로운 경험의 구조가 형성되는지의 문제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첫째, 인간-기술-미디어가 결합된 새로운 연합환경이란 무엇인지를 개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여기서 가타리의 생태철학, 베르크의 외쿠메네, 그리고 스티글러의 기술과 연합환경에 관한 통찰을 이론적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테크놀로지와 미디어, 그리고 인간의 새로운 연합환경이라는 문제를 전통적인 미디어 이론이 상정한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요한 발판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는 새로운 미디어 이론은 우리의 생활환경 자체가 미디어를 축으로 재구조화된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통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둘째, 논의 과정에서 여기서는 새로운 인간-기술-미디어 연합환경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통치 합리성의 변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등장이라는 조금 더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위치시켜 보았다. 여기서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은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함께 전개된 규율적 통치성의 진화의 산물이자, 동시대적인 기술적·행정적 장치와 테크닉의 불균등한 집합체라는 성격을 가진다. 그것은 과거의 규율적 주체화의 과정을 테크놀로지 기반의 자동화된 연산 및 가치평가를 통한 주체들의 새로운 - '자동화된' - 사회적 관계성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그 핵심으로 삼는다.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된 사회성'은 이미 고도화된 지능정보 기술,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확산과 맞물린 새로운 사회 혁신 프로그램의 일부로 전면화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점들을 2020년 이후의 팬데믹의 순간에 나타났던 주요한 변화의 양상과 결부시키면서, 팬데믹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거나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팬데믹의 순간은 바로 이러한 기획이 한층 고도화된 국면이자, 동시에 더욱 폭발적인 속도와 범위로 대중들의 일상에 침투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국면이었다. 그리고 이는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시대에 인간과 기술, 그리고 미디어가 수립한 새로운 연합환경의 특성과 이를 기반으로 삼은 거버넌스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주장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K-방역이라는 이름의 ‘성공 모델’에서도 디지털 미디어와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민간-공공 협력모델의 구축으로 이어졌던 일련의 과정이 가장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sup>12)</sup>.

정치적인 측면에서 ‘수의 통치’, 가치와 가치평가를 통한 거버넌스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 자체에 대해 적대적인 측면을 가진다. 알려진 대로 정치와 민주주의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고 또 번거로운 일이다. 또 현대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민주적인 의사 형성과 의사결정은 오히려 그만큼 느려진다. 이는 곧 정치와 민주주의 자체가 경제적·기술적 환경의 소위 ‘가속화’(Rosa, 2013/2020)에 배치되거나, 적어도 속도에 동기화(싱크로나이즈)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와 민주주의가 경제적·기술적 속도의 장애물로 손쉽게 치부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는 정치적 규제를 줄임으로써 사회경제적·기술적 과정들을 더 빠르게 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그것이 지

---

12) 물론 그것이 2000년대 이후의 이른바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한국 사회가 추구해 왔던 새로운 축적 모델의 근간이었고, 따라서 당대 한국 자본주의 전체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여전히 계승하는 것이었다는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김창엽, 2020, 122쪽).

난 시기 '사회 혁신'의 이름으로 진행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변화의 경향은 한국 사회가 형성시킨 인간-기술-미디어 연합환경의 핵심적인 운영 원리이자 행위 규칙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대의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인간-기술-환경 네트워크의 문제, 그리고 정치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규정짓는 지배적인 '사회적 상상(social imagination)'의 형태가 이러하다면, 이러한 지배적 담론이 전제하는 행위 규칙에 대항할 수 있는 시민들의 대항품행(*conter-conduct*)의 가능성은 과연 어느 얼마나 될까? 기술과 미디어를 다루는 모든 문화정치적 검토의 궁극적인 귀결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변 가능성의 문제일 것이다. 대중들이 자신들의 생활환경으로 이미 고착되고 있는 디지털 연합환경에서 그저 선언적으로 그러한 행위 규칙의 방향성(*orientation*)을 거부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답변하지 않았다. 단지 어떤 형태로든 보다 '좋은 방법으로 통치받거나, 아니면 덜 통치받는 방법'으로 표출되기 마련이다(Monod, 2019). 모노의 표현처럼 통치와 통치술에 관한 무수한 문헌들이 보여주는 사례들은 결국 대중들이 '너무 지나치게 통치당하지 않는 기술(*l'art de ne pas être trop gouverné*)', 혹은 '그런 식으로 통치당하지는 않는 기술(*art de ne pas être tellement gouverné*)'에 관한 것이었다(*ibid.*, p. 9). 이는 시위와 같은 적극적인 정치적 저항은 물론, 그보다 미시적인 공간에서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중들의 보다 적극적인 행위 규칙의 재구성 활동일 수 있다. 푸코가 생의 말년에 다가갈수록 강조했던 것은 정치에 대한 규범적 태도 혹은 이상적인 정치와 통치 합리성에 대한 비판이나 저항보다는, 오히려 보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작동하는 정치적인 질서에 대한 일상적 투쟁의 문제였다(Gordon, 1991, p. 30).

팬데믹의 순간은 이처럼 우리에게 지배적 담론이 자연스럽게 또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든 인간-기술-미디어 연합환경의 작동 방식을 전면화시킨 계기였지만, 동시에 여기서 탈피한 새로운 삶의 형식과 규칙 수립의 가능성을 질문하게 만든 전환의 순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향후 디지털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한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탐색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연구가 제기한 이슈들이 향후의 심층적인 탐색을 위한 미디어 이론의 확장과 그것의 사회정치적 함의의 이해 심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김은지 (2018). '사회혁신', 변화를 '제작'하는 사회운동의 등장: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제26권 2호, 7-57.
- 김정호 (2020. 3. 18). [김정호의 AI 시대의 전략] "코로나와 AI가 맞붙을 미래戰 ... 인류 생존을 건 한판 승부". <조선일보>. URL: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8/2020031800051.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8/2020031800051.html)
- 김창엽 (2020). '사회적인 것'으로서 코로나: 과학과 정치 사이에서. 김수련 외 (12인 공저), <포스트 코로나 사회: 팬데믹의 경험과 달라진 사회>(107-125쪽). 서울: 글항아리.
- 김홍중 (2020). 코로나19와 사회이론: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비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4집 3호, 163-187.
- 류연미 (2014).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활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선희 (2021). 인간-미디어 공생체의 사회: 포스트휴먼의 사회성과 윤리적 실천. <언론과 사회>, 29권 4호, 5-49.
- 박진우 (2021). 팬데믹 순간과 '뉴노멀'의 문화정치: 위기 국면의 담론 구조에 대한 비판. <한국언론정보학보>, 109호, 9-39.
- 송석휘 (2015). 지방정부 사회혁신에 대한 평가와 과제: 서울시 사회혁신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25권 2호, 153-189.
- 오하나 (2020). 돌봄: 인류 살리기로서의 돌봄에 대한 상상. 추지현(편),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코로나19와 일상의 사회학>(127-150쪽). 서울: 돌베개.
- 윤석민 (2020). <미디어 거버넌스: 미디어 규범성의 정립과 실천>. 서울: 나남.
- 이동후 (2021a). 코로나-19 시대의 디지털 교실에 관한 미디어 생태학적 탐구: '줌'이 매개한 비대면 교실 환경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35권 2호, 98-130.
- 이동후 (2021b). <미디어는 어떻게 인간의 조건이 되었는가: 미디어 생태학적

- 통찰). 서울: 컬처북.
- 이승철·조문영 (2018). 한국 '사회혁신'의 지형도: 새로운 통치 합리성과 거버넌스 공간의 등장. <경제와 사회>, 120호, 268-312.
- 이하너 (2020. 5. 9). 방역과 사생활, 같이 갈 수 있다. <경향신문>. URL: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5092022001>
- 장훈교 (2016). 사회혁신의 두 얼굴: 자기지배와 자기착취의 경합 공간(1). <사회혁신의 시선>, 제3호, 1-19.
- 황정아 (2020). 팬데믹 시대의 민주주의와 '한국모델'. 황정아 외(공저),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의 길>(15-43쪽). 파주: 창비.
- <경향신문> (2021. 10. 13, 2021. 10. 17, 2021. 10. 21). 기획특집 [감염병 시대, 집회의 미래]. URL: <https://m.khan.co.kr/series/articles/as296>
- Agamben, G. (2021). *Where Are We Now? The Epidemic as Politics*. 박문정(역)(2021). <얼굴 없는 인간: 팬데믹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 서울: 효형출판.
- Andersen, J. (2018). Archiving, ordering, and searching: Search engines, algorithms, databases, and deep mediatization. *Media, Culture & Society*, 40(8), 1135-1150.
- Andrejevic, M. (2019). *Automated media*. 이희은(역)(2021). <미디어 알고리즘의 욕망: 자동화된 미디어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컬처북.
- Berque, A. (2000). *Écoumène: Introduction à l'étude des milieux humains*. 김웅권(역)(2007). <외쿠메네: 인간 환경에 대한 연구 서설>. 서울: 동문선.
- Boltanski, L. & Chiapello, È. (1999). *Le nouvel esprit du capitalisme*. Paris, France: Gallimard.
- Bucher, T. (2018). *If...then: Algorithmic power and politics*.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Carnevali, B. (2020). *Social appearances: A philosophy of display and prestige*.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Chace, C. (2016). *The economic singularit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death of capitalism*. 신동숙(역)(2017). <경제의 특이점이 온다: 제4차 산업혁명, 경제의 모든 것이 바뀐다>. 서울: 비즈페이퍼.
- Citton, Y. (2017). *Médiarchie*. Paris, France: Seuil.
- Clover, J. (2021). The rise and fall of biopolitics: A response to Bruno Latour. *Critical Inquiry*, 47(2), 28-32.
- Couldry, N. (2020). Recovering critique in an age of datafication. *New Media & Society*, 22(7), 1135-1151.
- Dean, M. (2010). *Governmentality: Power and rule in modern society* (2nd ed.). Los Angeles, CA: Sage.
- Fassin, D. (2020). La valeur des vies: Éthique de la crise sanitaire. *Par Ici la Sortie!*, 1, 3-10.
- Fassin, D. (2021). *Les mondes de la santé publique: Excursions anthropologiques. Cours au Collège de France, 2020-2021*. Paris, France: Seuil.
- Foucault, M. (1994). Résumé du cours Du gouvernement des vivants. In D. Defert, F. Ewald, & J. Lagrange (Eds.). *Dits et écrits tome IV*, Paris, France: Gallimard, 125-129.
- Foucault, M. (2004). *La Naissance de la biopolitique: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8-1979*. 오트르망(역)(2012).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 서울: 난장.
- Gordon, C. (1991). Governmental rationality : An introduction. In G. Burchell, C. Gordon, & P. Miller (Eds.). *The Foucault Effect : Studies in Governmentality* (pp. 1-52).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uattari, F. (1989). *Les trois écologies*. 윤수중(역)(2003). <세 가지

생태학). 서울: 동문선.

- Guattari, F. (2018). *Qu'est-ce que l'écosophie?*. Paris, France: Nouvelles Lignes.
- Illouz, E. (2020). Le foyer peut-il être un refuge? *Par Ici la Sortie!*, 1, 11-17.
- Klein, N. (2020. 5. 13). How big tech plans to profit from the Pandemic. *The Guardian*.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news/2020/may/13/naomi-klein-how-big-tech-plans-to-profit-from-coronavirus-pandemic>
- Lamont, M. (2012). Toward a comparative sociology of valuation and evalu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38, 201-221.
- Lash, S. (2018). *Experience: New foundations for the human sciences*. Cambridge, UK: Polity Press.
- Latour, B. (2019. 5. 31). "L'Apocalypse, c'est enthousiasmant" entretien avec Jean Birnmaum. *Le Monde*. Retrieved from [https://www.lemonde.fr/idees/article/2019/05/31/bruno-latour-l-apocalypse-c-est-enthousiasmant\\_5469678\\_3232.html](https://www.lemonde.fr/idees/article/2019/05/31/bruno-latour-l-apocalypse-c-est-enthousiasmant_5469678_3232.html)
- Latour, B. (2021). *Où suis-je?*. Paris, France: Empêcheurs de Penser Rond.
- Le Bras, H. (2000). *Naissance de la mortalité: L'Origine politique de la statistique et de la démographie*. Paris, France: Gallimard-Seuil.
- Mitchell, S. (2019). "Warning! You're entering a sick zone": The construction of risk and privacy implications of disease tracking apps. *Online Information Review*, 43(6), 1046-1062. <https://doi.org/10.1108/OIR-03-2018-0075>
- Monod, J.-C. (2019). *L'Art de ne pas être trop gouverné*. Paris, France: Seuil.
- Nay, O. (2020). Can a virus undermine human rights? *The Lancet*:

- Public Health*, 5(5), 238-239. [https://doi.org/10.1016/S2468-2667\(20\)30092-X](https://doi.org/10.1016/S2468-2667(20)30092-X)
- Ong, A. & Collier, S. J. (Eds.). (2004). *Global assemblages: Technology, politics, and ethics as anthropological problems*. Cambridge: Blackwell.
- Peters, J. D. (2016). *The marvelous clouds: Toward a philosophy of elemental media*. 이희은(역)(2018). <자연과 미디어: 고래에서 클라우드까지, 원소 미디어의 철학을 향해>. 서울: 썬더북.
- Rechwitz, A. (2020). *The society of singularities*. Medford, MA: Polity.
- Rosa, H. (2013). *Alienation and acceleration: Toward a critical theory of late-modern temporality*. 김태희(역)(2020). <소외와 가속: 후기 근대 시간성 비판>. 서울: 엘피.
- Simondon, G. (1958). *Du mode d'existence des objets techniques*. 김재희(역)(2011).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서울: 그린비.
- Steyerl, H. (2017). *Duty free art: Art in the age of planetary civil war*. 문혜진·김홍기(역)(2021). <면세 미술: 지구 내전 시대의 미술>. 서울: 위크롭프레스.
- Stiegler, B. (1994) *La technique et le temps. 1, La faute d'Epiméthée*. Paris, France: Galilée.
- Supiot, A. (2015). *La gouvernance par les nombres : Cours au Collège de France (2012-2014)*. 박제성(역)(2019). <숫자에 의한 협치>. 서울: 한울아카데미.
- van Dijck, J. (2014). Datafication, dataism and datasurveillance: Big data between scientific paradigm and ideology. *Surveillance & Society*, 12(2), 197-208.
- Zylberman, P. (2014). *Tempêtes microbiennes*. Paris, France: Gallimard.

투 고 일 자: 2022년 04월 05일

심 사 일 자: 2022년 05월 01일

계재확정일자: 2022년 05월 23일

## Abstract

# Digital Technology, and the Reshaping of 'Code of Conducts'

Some Considerations on 'Human-Technology-Media  
Associated Milieu' and Governance System in the Age of  
Pandemic

**Jin-Woo PARK**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spread of digital media, so-called 'human-technology-media associated milieu', and, in particular, the emergence and operation of a new governance system, in connection with changes in social power. Through this, it examines the problem of how our daily life is reconstructed, how a new structure of a experience is formed by a new 'technological milieu' based on digital technology. To this end, first, this study conceptually explains what is new 'associated milieu' in which human-technology-media are combined. Second, in this process, we connect the associated milieu with the change in the 'governmental rationality' of our age we live in. The emergence of a new governance system is to replace the old process of disciplinary subjectivation with a core driving mechanism for the 'automated' social relationship of subjects through technology-based automated calculation and valuation. In this study, we link these issues with aspects of the major changes that occurred in the post-2020 pandemic moment.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andemic was an important moment to accelerate these changes, and to make them

'natural' premise. In the course of discussion, it is argued that a new media theory horizon is essential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 methods of the new 'living-milieu' established by digital technology and media in more detail. suggest that more covert and clandestine media techniques are being used to emphasize the sexuality of female players, and that deep learning can be used to distinguish visual images from broadcasting sports channels.

**KEYWORDS** Human-technology-media Associated Milieu, Pandemic, Governmentality/Governance, Automated Subjectivity, Code of Conducts